

안보와 統一 : 두 價値의 兩立問題

김 갑 철
(전국대학교 교수)

1. 문제의 제기

21세기 문턱에 선 현시점에서 우리는 민족통일 문제에 관련하여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요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오랜 연구축적을 쌓았으나 여전히 새로운 시각과 해답을 시도해야 할 것이 있다.

- (1) 우리는 國家안보와 民族統一을 어떻게 調和시켜야 하는가?
- (2) 가장 바람직한 民族統一의 過程은 무엇인가?
- (3)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民族統一을 촉진할 수 있는가?
- (4) 우리의 民族統一 政策의 環境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5) 統一후 社會再統合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6) 統一 韓國의 가장 理想的인 政治體制는 무엇인가?

이상 열거한 여섯 가지 분석초점 모두를 여기에서 다루기는 힘들다. 여기서 필자의 주된 관심은 첫째 문제 곧 민족분단 반세기 동안 통일정책 결정의 두 爭點, 안보가 우선이나 아니면 통일이 우선이나하는 이 두가치의 兩立 可能性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머지 문제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통일환경의 변화는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의 속도와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推論할 수 있다.

〈統一 · 安보 環境의 변화〉

민족 분단이 시작되어 고착화되던 1940년대와 50년대에 비하여 21세기 문턱에 들어

선 현시점은 국제정치 질서와 지역정세(regional situations)가 크게 변하였다. 소련과 동구의 공산주의 일당체제가 붕괴되고 민주화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과 월남 등 아시아 공산주의체제가 중앙집권적 명령경제(command economy)를 시장경제(소위 market socialism)로 개혁하였거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분단과 그 固定化의 독립변수였던 냉전체제(cold war system)가 깨지고, 맑스주의, 레닌주의와 그 변형의 혁명 이데올로기의 퇴조현상이 현저히 그리고 넓게 퍼지게 되었다. 東西 兩極體制는 多極體制로 전환되었으며, 의회 민주주의와 自由 企業體制(free enterprise) 또는 시장경제 체제의 世界的 制霸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민족국가들로 하여금 국가안보, 국가이익, 국제평화의 개념과 전략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하였다.

미국의 신안보전략 개념도 그 일례에 속한다. 금년에 발표한 미국의 두 가지 정책보고서 '95 연두교서와 '95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고찰해 보자. 이 비교고찰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의 구성요소 가운데 경제적 번영과 이를 달성키 위한 海外市場의 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이 하나임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 “미국의 안보는 아직도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세계 영도력 유지에 달려 있다.”(Clinton 미 대통령의 '95 연두교서('95. 1. 24))
- “미국의 경제이익과 안보이익은 이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미국의 번영은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입에 달려 있다 ……미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의 外國市場 接近이 보장되어야 한다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 개입과 확장'('95. 3. 7)]

한편 한반도의 주변 4強은 남북한의 속도 빠른 통일이 몰고 올 불확정성과 불안보다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와 공존을 바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 한반도의 安定基調 위에 現狀維持를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는 대립과 긴장이 수그러 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대북 쌀 제공, 대화 재개 노력은 ② 북한의 남한정부 정통성 불인정 등 北韓의 革命的 統一論 견

지, ⑩ 북한의 핵무기 보유노력 불포기 등으로 인하여 가시적 성과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北韓을 主敵으로 하는 안보 개념과 사랑으로 감싸야 할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즉 민족통일) : 현시점에서 안보와 통일, 두 概念과 政策을 어떻게 調和할 수 있는가? 이 글은 안보와 통일 두 개념 사이의 相合과 葛藤을 고찰하고 이 두 價値의 兩立 가능성을 모색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安保와 統一 : 두 價値는 兩立할 수 있는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敵'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통일을 위한 사랑과 抱擁'의 對象으로 보아야 하느냐?

<두 개념의 관계>

安保란 무엇인가. 안보의 전통적개념은 外的勢力의 전복이나 공격으로부터 민족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객관적 의미로서의 안보는 가치들(부와 권력)을 획득함에 있어서 위협의 부재상태를 말하며, 주관적 의미의 안보는 이들 가치들이 공격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부재를 뜻한다. 현대 사회과학자들이 국가안보의 개념에 관하여 말할 때, 그것은 "국가의 內的 價値들을 外部의 威脅으로부터 保護할 수 있는 能力" (the ability of a nation to protect its internal values from external threats)을 의미한다(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Encycr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그런데 국가의 내적 가치는 대개 그 나라의 헌법과 국민의 가치체계(value system)에 함유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행복 등을 보장하는 정치체제와 자유 평등 민주의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또 外部의 威脅은 북한 공산주의가 고수하는 혁명적 통일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양성해 놓은 북한의 무력으로부터 나온다. 고로 우리의 국가안보는 우리의 내적 가치체계를 북한과 미래의 假想敵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군사, 경제 및 정치역량)과 그 신장을 주요 임무로 한다. 자유와

민주정치 체제의 수호, 體制維持(system-maintenance), 사회경제 발전 그리고 외교 역량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편 통일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민족적 통일처럼 여러 하위개념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 통일은 정치적 결속이 없거나 또는 느슨한 실체로부터 고도의 자립적인 통합체계인 정치적 공동체로 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Etzioni, 1968 : 557). 즉 정치적 통일은 분열된 정치체계를 單一政體(a single body politic)로 통일하는 과정을 말한다. 같은 문맥에서 사회적 통일은 사회적 갈등이나 文化的, 理念的 龜裂 등으로 인하여 社會的 統合(coherence 凝結)이 缺如되었거나 낮은 수준의 실체로부터 고도의 자급자족적 통합체계인 문화적 공동체 또는 경제 공동체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안보와 통일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보자. 안보는 현존 정치체제의 수호, 유지 그리고 능률 제고와 관련된다면, 통일은 남과 북이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감수하거나 선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의든 타의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변화를 추진해야 하고 통일문화를 위한 새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서 안보는 미래에 대한 안전감을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나, 통일은 不確實性과 불안이 수반하기 마련이다.

〈安 保〉

國家安保의 연구는 民族國家들이 안보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정책들을 어떻게 기획, 설계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가에 주관심을 갖게 된다. 세계 2차대전 이래 국가안보에 관한 연구는 두 主題 즉 갈등과 협력(conflict and cooperation)을 兩極으로 하여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첫째 주제(갈등)의 연구는 국가안보는 갈등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국력을 극대화하는데 있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 환언하면 국가안보정책의 결정은 다른 나라를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 나라의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두번째 범주(협력)의 연구는 國力の 최소화를 강조하고 國際協力の 증대를 위해 의도적인 노력을 역설한다. 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견해는 모든 나라의 안보가 증가되면 자국의 안보능력도 커진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양극으로 하여 이 양극 사이에서 실제적 관심에 따라

여러 연구가 행해질 수 있다.

‘내적 가치’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안보는 정치체제의 안정과 능률에 직접 연결된다. 여기에서 정치적 이익과 대립되는 군사적 및 전략적 이익이 그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국가 안보체제의 복잡하고 중복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유용한 최상의 조직구조 그리고 핵기술과 경제문제를 다룰 최선의 전문가 충원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서 안보연구는 안보정책수립에 작용하는 公衆의 역할에 관해서도 관심을 쏟았다.

한편 세계화 시대에 한 나라의 안보는 여타 국가들의 안보역량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국가안보’(international security) 개념이 국가안보의 개념과 동일하게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지역 및 국제협력(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또 성취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와 국제협력 사이에는 분명한 연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평화와 협력의 국제체제 유지가 국가안보정책의 정당한 목표로 되어 가고 있다. 결국 국가체제의 총체적 행위패턴 통합이 외적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을 안 이상, 국가안보는 국가의 대내외적 활동의 통일을 조장하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국가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범주에서 경제적, 정치적 범주로 발전해 왔음을 고찰하였다. 협의의 안보 개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의 군사적 공격과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 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능력(국방력과 전쟁 수행능력의 주구성인자인 산업 잠재력 등)의 극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의 안보개념에 입각하면, 자유민주체제 유지와 성숙을 위한 체제능력(systems capability)의 강화, 經濟的 民主主義와 사회정의 실현에 의한 政治的 正統性 확립, 그리고 효율적 군사 방위체계 수립과 유지 ……즉 안으로는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며, 밖으로는 韓美 동맹관계의 활성화, 지역적 안보협력, 국제적 안보협력체제를 수립하고 나아가 統一의 外的 環境을 조성하는 것을 한국안보의 주입무로 삼아야 한다.

〈統 一〉

이제부터는 통일의 개념에 관하여 토론하기로 하자. 통일은 분열된 체제를 單一體制로 結合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 통일(unification)과 再統合(reintegration)은 서로 겹치는 부분과 각기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예컨대 정치적 통일은 분열된 정치체제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나라 만들기'(state-building)와 관련된다면, 사회적 재통합(문화적, 경제적 재통합)은 사회적 갈등이나 문화적 균열 때문에 생겨나는 현재적·잠재적 분열을 해소하는 '민족공동체 만들기'(民族形成, nation-building)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Kim, 1995 : 24).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통일 독립하였으나 사회적으로는 미통합상태로 있는 체제로 성장할 수 있다. 레바논과 나이지리아는 정치적 독립(통일)을 성취하였으나 문화적(종교적) 균열과 민족적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재통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급기야 內亂에 시달리게 되었다. 우리는 남북 예멘의 정치적 통일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재통합에 대한 심각한 고려없이 서둘러 이룬 통일은 內戰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독일 통일은 동독(DDR)이 서독(FDR)의 헌법질서에 평화적으로 흡수되는 前例 드문 사회적 실험이었다. 독일 통일의 실례는 서로 다른 두 政體와 정치 문화의 융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물리적 장벽을 허물어졌으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마음속의 장벽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 통일후 1년이 지난 1991년에 독일 국민은 통일은 오직 정치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진정한 통일(사회적 재통합)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Minkenburg, 1993 : 53-68).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통일이란 정치적 결속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그 결속이 매우 느슨한 실체로부터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찌오니는 '정치적 공동체'(political community)를 "자족적 통합체계"로, "통합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체계를 '연합'(union)이라 부르고 있다(Etzioni, 1968 : 554-555). 이로써 통일은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정치적 통합의 수준이 낮은 느슨한 통일 ↔ 그 통합의 수준이 높은 긴밀한 통합(곧 정치적 공동체); 통일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서 정치통일, 민족통일, 文化的 통합, 경제적 통일, 군사적 통합; 또 통

일과정과 관련하여 平和的 統一 ↔ 非平和的 統一; 民主的 統一 ↔ 親共的 統一; 中道的 統一 혹은 中立化 統一; 吸收統一(독일식), 協商統一(예멘식)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안보와 통일의 개념에 관하여 고찰하였는 바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7,000만 민족의 통일……우리 민족의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치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고 슬기롭게 그리고 두 가치를 함께 획득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고자 함에 있다.

<세 가지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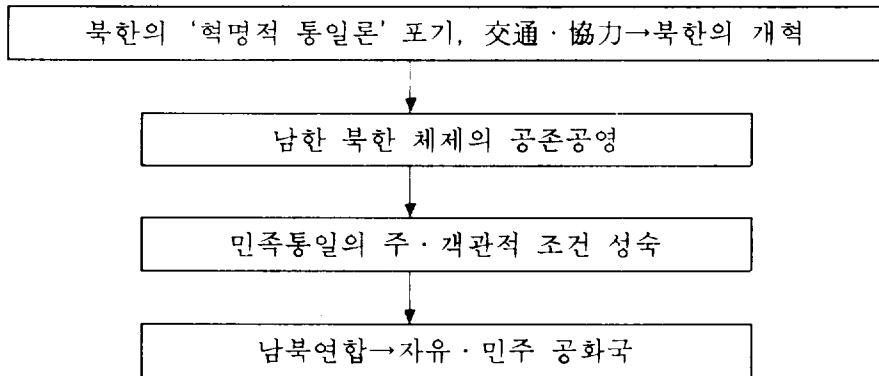
여기에서 3가지 대안을 상정해볼 수 있다. ㉠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통일정책, ㉡ 안보보다 통일에 가중치를 주는 통일정책, ㉢ 통일과 안보의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통일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 정책을 스케치한 것이고, <표 2>은 ㉡ 정책 대안의 골격을 간추린 것이다. ㉢ 정책 대안은 앞의 두 정책 대안을 토론한 뒤 서술하기로 하자.

안보 우선의 통일론(㉠)은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임에 틀림없으나 '무조건적 통일론'의 역기능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과 통일이 아무리 중요하다더라도 한민족 성원 각자의 자유 인권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가치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의하면 민족분단의 固定 深化過程(6.25 전쟁)과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은 그 根源이 모두 북한의 '혁명적 통일전략'(3대혁명력량 강화 → 남조선 혁명 → 조국통일)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통일은 먼저 북한이 혁명적 통일전략을 포기하므로 그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이 바탕위에 남북한 사이에 화합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 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통일 우선론(㉡)은 대략 다음과 같은 논거에 기초하고 있다. ① 북한에 '혁명적 통일'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북한의 무조건 행복을 강요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이다. ② 북한이 남한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1970년대의 남북한 상황에 기초한 것이므로 오늘날의 남북현실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현재 남한의 흡수통일론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③ 따라서 한국이 북한체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對美·日 修交문제, 美日의 對北 경제협력, 남한의

쌀 지원 확대, 우리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 권장 등) ④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대상인 북의 민족을 假想敵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족통일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改廢해야 한다. ⑤ 주한 미군의 존재는 민족 자주성과 자주통일 원칙에 반함으로 이를 조속히 철수하도록 해야 한다.

〈표 1〉 先安保 → 後統一의 概念的 틀



〈표 2〉 統一에 순기능하나 안보에 역기능하는 戰略

- 북한 체제의 安定을 위한 미·일과의 修交; 미·일의 대북한 경제협력 적극 추진
- 북한 경제의 회복과 주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南의 無償 支援 擴大
- “統一의 장애물 제거” → 國家保安法 개폐
- 民族的 自主性 신장 →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 * 民衆 統一論과 大同小異?

3. 북한의 ‘혁명적 통일’ 전략 : 변화할 것인가

김일성 이후 체제 (post-Kim Il-Sung Regime) 는 혁명적 통일전략을 변화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역학관계에 걸맞게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견지할 것인가? 북한의 혁명과 통일전략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김일성이 공식화한 것으로서 ‘3대혁명역량 강화’ → ‘남조선혁명’ → ‘조국통일’로 이어지는 繼續革命論에 입각하고 있다. 그런

데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걸쳐 김일성의 혁명적 통일론이 서 있는 기초가 무너지고 말았다.

소련 동구에서의 공산주의체제 붕괴, '중국식 사회주의'의 脫革命性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주의의 세계적 제패로 소위 '국제적 혁명역량'이 약화 내지 와해되었으며, 북한지역의 '혁명기지 강화' 노선도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역기능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정신적('정치사상적') '혁명기지'는 몰라도 물질적 혁명기지는 약화일로에 있다. 남한의 '혁명역량 강화' 전략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되어 간다고 보겠다.

북한의 정치적 리더쉽이 合理的 思考體系를 가졌다면, 위와 같은 혁명역량 약화라는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適應的 態度를 당연히 취했어야만 옳았다. 그런데 북한이 "革命的 統一 戰略"을 포기했거나 본질적으로 수정했다는 어떤 증거도 아직까지는 발견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北韓에서 '金日成 없는 金日成主義체제'를 이끌고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모델(market socialism)을 채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런데 나진 선봉 등 몇 군데의 경제특구에 대한 제한적 개방(controlled opening)을 시도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경제체제의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김정일, '94. 11. 1. 논문). 여기에서 북한연구에 합리적 모델의 적용을 망설이게 만드는 주된 논거가 있다.

여기에서 북한이 그들이 주장하는 혁명적 통일전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북한의 정치적 리더쉽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도 김일성주의를 답습하고 있다. 김일성주의 혁명관은 '남조선혁명'(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조국통일 3대원칙, 5대 강령)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 기본구도는 ① 3대혁명 역량강화 → ② 남조선 혁명 → ③ 조국통일 → ④ 전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네 가지 차원의 계속혁명론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계속혁명이란 3대혁명 운동(사상, 기술, 문화혁명)에 입각하여 한단계 혁명이 성공하면 곧이어 다음 단계의 혁명을 계속 추진하여 최종 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투쟁을 쉬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김일성(김정일)의 南韓 情勢判斷과 行動綱領

- A. 南韓社會 敘述 -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
 - 대한민국은 反統一, 反民族 政權
 - 民族的 愛國者와 民主的 人民大衆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
- B. 원인 분석(설명) - 「美帝」의 '新植民主義' 政策
- C. 打開方法(戰略戰術) - '민족해방, 人民民主主義 革命'의 추진(미군철수, 현정권 타도)
 '조국의 自主的 平和統一'(北韓으로의 병합·흡수 통일)
 ** '조국통일을 위한 全民族大團結 10대 강령'(1993)
- D. 최 종 목 표 - 全韓半島에서의 '공산사회 건설'

〈출처〉 허중호,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계속혁명의 일환으로 김일성이 體系化한 혁명적 통일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김일성의 남한사회 현실을 보는 인식과 해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혁명적 통일전략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김일성의 남한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4 참조)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문제'를 제기시킨 '역사적 근원'을 한마디로 미군의 남한 점령에서 찾고 있다. 김일성에 의하면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① 해방후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조국이 분단되었다는 점, ② 남한은 미국의 오랜 신식민지정책으로 인하여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었다는 점, ③ 미군은 남한을 전조선 강점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고 있다는 점, ④ 미국과 남한의 집권자들은 전조선의 민주발전과 조국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는 점(허중호, 1975: 13-18)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다분히 스탈린주의식 정세평가(당파적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김일성은 미군의 남한 진주 및 그 식민지 정책의 결과로 생겨난 오늘날의 한반도 정세가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하게 한 유일한 근원이

라고 주장한다. 만일 ‘美帝’가 남한을 식민지화하지도 않고 민족분열 책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혁명과 통일문제는 애당초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은 “남북조선의 전체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통일적인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고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려 왔을 것이다.”(허정호: 17-18)라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이 논리는 김일성 일인 독재정치하에 사는 것은 ‘민주주의 독립국가’에서의 행복한 삶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식민지주의 종속국민으로 착취와 탄압하에 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한이 ‘美帝의 植民地’라는 이데올로기적 낙인없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의 모든 構圖는 기초를 상실하고 만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김일성의 혁명적 통일이론과 전략은 국제 혁명역량의 쇠퇴의 충격으로 인하여 수정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김일성 이후 체제가 김일성의 주체사상 체계를 통치논리로 견지하는 동안은 혁명적 통일의 기본구도는 크게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정책(혁명과 건설)의 지도원칙이 되고 있으므로 김일성이 말하는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과 전략·전술도 당연히 주체사상의 기본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은 ‘김일성식 사회주의’(즉 김일성 개인숭배, 권력세습, 계속혁명,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시장경제체제 거부), 폐쇄사회, 反修正主義鬭爭 고수)를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다. (김갑철, 1990: 183-225) 때문에 개혁과가 집권하거나 김일성 격하운동이 승리하지 않는 한(가까운 시일안에 북한에서 흐루시초프나 등소평과 같은 개혁과 공산주의자가 권력체계를 장악하리라는 어떤 징후도 발견하기 어렵다.) 주체사상은 상당기간 건재할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 사후 일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주체사상 곧 김일성주의가 신성불가침의 교조로서 권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일성주의에 기초한 혁명적 통일이론의 기본틀은 결코 쉽게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하나는 '94년 11월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로동신문, '94. 11. 4.)이고, 나머지 하나는 '95년 6월의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다”(로동신문, '95. 6. 21.)이다. 앞의 논문에서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①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② “공산주의 운동 안에서 개량주의자들, 수정주의자들이 <계급협조>를 주장하면서 혁명운동 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었다. 오늘 사회주의 배신자들도 자본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협력>에 기대를 걸면서 자본주의 복귀소동을 벌이고 있다. 력사는 착취계급의 <선의>나 <계급협조>에 기대를 거는 것은 혁명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③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신 사회주의는 사람 위주의 사회주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고 …… 가장 우월하고 가장 偉力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④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간개조 사업, 사상개조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우리 혁명의 정치 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군사력을 튼튼히 다짐으로써 오늘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 나가고 있다.”

김정일의 위 논문은 ①에서 소련·동구에서의 공산체제 붕괴는 ‘사회주의 이론’의 오류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잘못 운영한 기회주의자들 때문이라고 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세관, 사회 역사관을 반영하였다. 김정일은 ②에서 등소평식 개방·개혁, ‘시장 사회주의’와 고르바초프의 ‘인간적 사회주의’를 ‘사회주의 배신자’로 규정하고, 또 국제경제체제와의 協力을 ‘자본주의 복귀소동’으로 규정, 이를 배격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이나 남한의 ‘선을’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③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이 체계화한 북한의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거센 역풍을 이기고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신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④에서는 김일성식 사회주의 노선(사상, 문화 기술의 3대혁명 노선)을 견지하면서 계속하여 현재의 경제정책과 군사정책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김정일의 또 하나의 논문(’95. 6.)은 ’94년 겨울 논문의 각론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좌절이 남긴 가장 심각한 교훈은 사회주의의 변질이 사상의 변질로부터 시작되며 사상전선이 와해되면 사회주의의 모든 전선이 와해되고 종당에는 사회주의를 송두리째 말아먹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서는 사상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나가야 한다.”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인민들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

는 사업을 저바리는 한편 <공개성>과 <다원주의>의 구호 밑에 사람들속에 사상적 혼란을 조성하고 반동적인 부르주아사상 문화의 침투에 완전히 문을 열어 주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공개성>과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 사회주의 사회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이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 침투는 <협조>와 <교류>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 반동적인 부르주아사상 독소로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부패 타락시키는 악랄한 와해수법이다.”

김정일의 두 논문은 별개의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총론과 각론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는 첫번째 논문에서 이미 언급한 '인간개조 사업'과 '사상개조 사업'의 강화 그리고 '부르주아문화 침투'의 경계를 두번째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 일본 그리고 남한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물어 올 "부르주아 반동사상과 섞어빠진 부르주아 문화와 생활풍조가 침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상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노선의 표현이라 보겠다. 김정일이 말하는 '공개성'은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말하는 개방(정보의 개방, 사상 통제의 완화) 정책과 동일하다. 또 '다원주의'는 공산당 일당체제를 복수 정당체제로 개혁함을 의미한다. 공산당이 진정코 노동자 농민을 대변한다면 총선에서 다수표를 얻어 정정당당하게 집권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의 김정일의 두 논문은 북한은 앞으로 개혁을 거부하고 김일성의 유혼통치(Kimism without Kim Il-sung)를 계속하겠다는 것 그리고 경제특구를 국제경제 체제에 개방하는 경우에도 부르주아사상 독소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사상사업을 강화하여 혁명적 경각심을 다그친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 된다.

4. 民族統一：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

<고려사항>

그렇다면 안보 우선주의, 통일 우선주의 두 가지 어프로치를 지양하고 통일과 안보의 양개념이 相合하는 통일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나열해 보기로 한다.

① 안보·평화·통일 세 개념이 相合하는 統合이 이룩될 것, ② 統一후의 사회적 재통합에 유리한 통일과정이 바람직하며, ③ 국민의 統一 未來像에 대한 不確實性, 不安感을 해소해줄 수 있도록 統一 目標文化(통일국가의 정치·경제·사회생활의 질서와 가치체계)를 획정,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상 세 가지 고려 사항을 충족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성숙한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남한사회와 북한체제의 변화를 상정하지 않고 통일을 논의해 보았자 안보와 통일, 두 개념의 상합을 도출해 내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았다. 먼저 북한체제가 변화해야 한다. 김정일이 현재의 김일성식 사회주의 골격을 유지하되 우선 통일에 대한 혁명적 어프로치를 점진적으로 실용주의적·합리적 접근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북한의 실용주의 노선과 혁명적 접근방식의 완화는 남한의 안보 우선주의의 대북 경계심을 이완시켜 북한동포 사랑을 적극화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개인소득 10,000불의 선진국답게 經濟的 民主主義를 적극 수용하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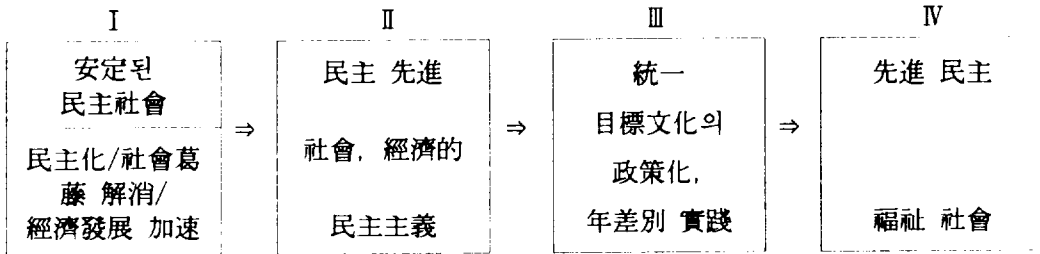
이리하여 남북한 사이에 평화체제가 제도화될 경우, 북한의 정치 리더쉽은 '위로부터의 변화'(개혁과 개방)를 통해 남북 사이의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수렴형, 협정형(Yemen Model), 總選型(정당 통합 → 총선거후 통일정부 수립) 등의 통일과정, 모델을 검토해 보는 단계에까지 국민의 통일문화(통일의 당위성, 과정, 실현에 대한 국민 각자의 주인의식)가 성숙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 구도화해서 그려보면 <표 4>와 같이될 것이다.

<남북한의 변화와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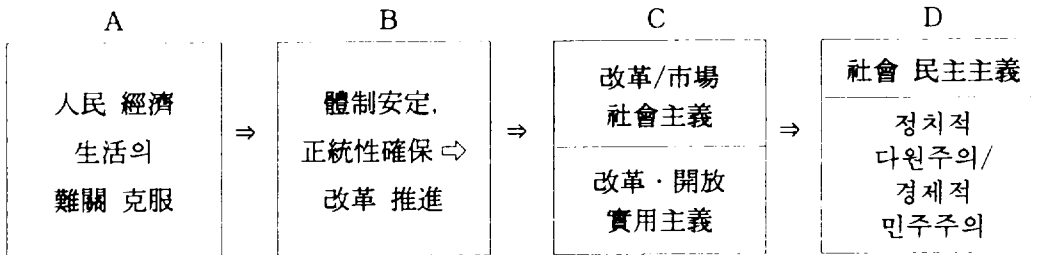
북한은 현재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마무리와 심각한 경제난 특히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전외교역량을 경주하고 있다. 평양정권은 미국과 輕水爐 제공문제와 관련된 쿠알라룸푸르 합의('95. 6. 13.)를 이룬 가운데 對美平和協定체결을 외교부 비망록('95. 6. 30)을 통해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인민군 관문점 대표부 이찬복(대표)이 유엔司令部 스미스 小將 앞으로 '미 북 군사 당국자간 접촉'을 제의하는 편지(7. 4.)를 발송했다. 그리고 일본과는 東京會談(6. 24 - 6. 30)을 갖고 쌀도입(총 30만 톤)에 합의하고 아울러 對日修交會談 재개를 꾀하고 있다.

〈표 4〉 南北體制的 變化, 發展과 民族統一

● 남 한



● 북 한



- I B :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 남북한 공존틀에 합의
- II B / II C : 남북교류,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대표부 교환설치.
- III C / IV C : 경제적 공동체 형성가능, 느슨한 통일체제 접근시도
- IV D / III D : 완만한 정치적 통일합의, 이데올로기 수렴현상이 두드러짐.

북한이 '95년 봄부터 정전협정을 無實化시키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저의는 어디에 있는가. 북한은 中立國監視委員會 폴란드 대표단을 강제 철수시키고('95. 2. 28.), 中監委 사무실을 폐쇄(5. 3.)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정전협정 관리기구들의 기능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남한을 배제한 채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이를 달성키 위한 수단으로 美·北 將星級會談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남한측의 군정 위대표 접촉제의(5. 19.)는 거절하였다. 한편 북한은 6월 25일부로 정전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겠다(6. 22.)고 위협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전협정 무실화 行態는 남한을 배제한 채 '북·미 평화협정'체결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일까. 북한의 정책 입안자들이

미-북 쌍무적 평화협정이 성취되리라고 믿는 그렇게 단순한 인물들일까. 이를 전략적으로 볼 때, 김정일이 김일성식 사회주의와 '혁명적 통일론'(남조선혁명 - ▶ 조국통일)이 원형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전술적으로는 어떨나 '外壓'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또 경제특구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의 필요에 따라 何時라도 남북 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대남 전략에서의 革命性 固守와 대외정책에서 適應的 態度, 이중성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김정일 권력승계와 그 체제의 안정유지라는 최우선의 단면목표와 신속한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한 개방이라는 현실주의가 모순 갈등을 겪으면서 빚어내는 외적 표현양식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역기능의 개선(개혁)과 외적 압력에의 적응(개방) 등 북한 체제가 당면한 현실적 이익을 한편으로 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떠받들어 나가는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이 갖는 경직성, 한계성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이 두 이익과 논리 사이의 괴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이와 같은 상반된 이익표출 가운데 후자 즉 김일성주의식 체제유지 논리가 독립변수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북한이 견지해 왔던 경제특구 개방정책 등 통제된 변화가 대남,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변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걷어드리고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진지한 태도로 나와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 지도자들은 파산에 직면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국제 경제체계와의 협력체계를 수립, 강화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적응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생활수준 향상을 통하여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 최급선무로 되었다.

일반적으로 레닌주의 체제들(Leninist Regimes)은 政治的正統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수단을 활용한다. ① 통치이데올로기 교육을 철저히 內面化한다(예컨대 “온 사회의 주체사상 일색화 운동” 등). ② 民族主義에 호소한다(스탈린, 모택동, 호치민, 티토, 차우셰스쿠, 김일성 등). ③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경제개혁을 단행한다(호루시초프, 고르바초프, 덩소평, 카다르, 90년대 초의 베트

남, 몽고 등). ④ 民主化를 부분적으로 또는 공산당의 정권유지를 전제로 한 일정한 한계 안에서 추진한다(집단지도체제, 사회통제의 완화, 고르바초프의 '인간적 사회주의' 정치적 다원주의 등).

1970년대 초부터 김일성은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나름대로 체계화·공식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동시에 “조국통일” 문제를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김일성 일인체제의 정통성 조성논리로 오늘까지 이용하고 있다(김갑철, 1990 : 1-12). 김일성이 주체사상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를 활용한 정통성 조작의 기본논리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구호와 연결된다. 김일성식('우리식') 사회주의는 '사람 위주'의 철학과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므로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 고로 앞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정권은 '위대한 수령의 항일투쟁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 애국자들'의 정권인 반면, 남한에는 '친일 매국노와 친미 반동분자들'이 세운 정권이 反北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데올로기적 허구로써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이 초인적 존재가 창안한 주체사상을 그 아들 김정일이 '김일성주의'로 승화 발전시켰으므로 '대를 이어'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정치 희곡을 정당화하고 있다. 어찌했던 김일성은 민족주의와 주체사상을 교묘히 調合하여 북한을 50년 가까이 통치하는데 이를 잘 써먹었다고 보겠다.

문제는 이제부터라 할 수 있다. 김일성주의 승계를 명분으로 후계자가 된 김정일이 약효가 다 떨어진 김일성의 처방을 再湯할 수밖에 없다는 데 進退維谷의 어려움이 있다. 이미 숙지하고 있듯이 1970년대 말부터 김일성식 자립경제 노선은 그 역기능이 확산되어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동구에서의 공산주의체제의 몰락과 중국 사회주의변화는 북한 통치엘리트에게 정치·경제·안보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심리학적 방어기제와 더불어 체제 생존의 전략을 사용케 했는 바 그 중의 하나가 핵 카드로 표출되었다고 보겠다. 이것이 미·일과의 외교관계 및 경제적 협력관계로 발전하여 경제적 안보적 불안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조망해볼 때 정통성 확보의 나머지 두개 수단, 곧 경제체제 개혁과 개인숭배/일인 독재의 민주적 개혁조치 가운데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적 사회주의 채택없이는 북한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체제의 정통성 확보는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른다.

북한은 현재 변화된 정세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책대안을 놓고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상반된 논리에 직면하고 있다. 김일성주의 혁명노선

및 실천 방법들을 遺訓統治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철하여 혁명전통을 승계해야 하는 한편, 기존의 원리와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노선과 방법의 채택을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이다. 전자는 김일성식 사회주의에 대한 충실성 문제이며, 후자는 자본주의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해 나가는 것으로 현실주의에 대한 충실성 문제이다. 오늘날 김정일 정권 으로서는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두 가지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 나가는 것이 최대의 정책적 과제이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북한은 최근 잇따른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과 확대, 적극적 대외홍보, 국내 무역기구의 재편, 무역의 다양화-전문화-다각화, 수익성 위주의 투자자원 배분, 계획작성의 현실성 보장,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일정한 넓이의 토지이용권의 묵인 등이 눈에 띄고 있다. (조명철, 조선일보, '95. 6. 15.)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개혁-개방으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아직까지 북한은 체제와 방법론에서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과 개방의 개념을 별개로 인식하고 개방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개방정책의 주목적은 개방지구의 시장경제식 운영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윤으로 국가경제의 다른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해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어떠한 개방정책은 필연코 개혁을 불러오며 개혁정책은 다시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개혁 개방정책을 낳게 마련이다. 때문에 북한의 개방정책이 초기에 성공을 거두면 이것이 개혁의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主要因의 하나가 바로 경제문제이고 경제문제가 곧 바로 체제안정과 유지에 직결된다고 볼 때, 장차 북한의 개혁정책의 선택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핵'문제는 현실주의 정책과 연결되면서 풀려 나갈 것이다.

한편 남한의 정치체제와 사회가 통일을 선도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우선 사회경제의 선진화에 걸 맞는 보다 성숙하고 안정된 정치적 및 경제적 민주주의의 내면화가 요구된다. 이 목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한편 의식구조 면에서 민족공동체 의식이 육성됨으로써 이질적인 체제와 이념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표 5 참조).

이와 같이 남북한의 리더십은 각기 자기의 정치체제의 개혁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남한은 먼저 현재 진행중인 민주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당면한 사회적 갈등(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나아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한 목표문화에 접근하는 정치적, 사회적 개편이 착실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는 정치적 통일후로 미루어 둘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가능한 한 속히 정책화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체제의 리더십은 각기 대내적으로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남북한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정부가 민족통일의 추진 주체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교류와 협력이 내정 교란이나 혁명 수출의 공작수단이 아니라는 상호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민족통일 문제를 政略적으로 악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한국을 제쳐놓고 이들과 직접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자 해도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속도를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의 속도를 앞지를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좋은 싫든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대미, 대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한을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 남한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협력자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즉 남한은 이미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를 국가간의 무역이 아닌 민족내 경제활동으로 인정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북한의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을 혁명대상으로 보는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협력자로서 인식한다면 남북한의 共榮의 가능성은 매우 증대될 것이다.

5. 맺 는 말

이 글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남북의 통일 — 이 두 가치를 한쪽이 다른 한쪽을 몰아

붙이지 않고 相合하는 개념적 설계(Grand Design)의 지혜를 탐구하는데 분석초점을 두고 토론을 전개하여 왔다. 남한의 경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엘리트와 사회세력 가운데에는 안보쪽 가치에 가중치를 더하는 논리와 통일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뉘어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통일과정과 통일 미래상에 대한 비전의 차이,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또 역사와 현실에 대한 철학과 이념의 상이에서 오는 것으로서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장차 문화적 균열(cultural cleavage)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보, 평화, 통일의 개념들이 충족되는 통일의 대전략을 민족적 지혜를 모아 집대성하고, 이에 입각하여 통일세대 육성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정치사회화가 긴급하다. 그리고 안보적 이익과 평화적 통일의 가치를 하나로 조화해 가는데 不可缺의 조건은 ① 김일성 후계체제의 성격과 능력에 대한 과학적 평가, 그리고 ② 통일에 걸 맞는 남·북한의 변화, 발전에 대한 공통의 인식의 지평을 가져야 한다. 앞의 조건은 안보적 비중치와 관련된다면 뒤의 조건은 통일의 과정과 통일국가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의 것은 '북한 길들이기'에 대한 국가적 합의의 출발점을 보여줄 것이며, 뒤의 남북 양체제의 변화, 발전 전망은 통일 신세대들(해방 이후 세대)의 문화적 위상과 밀접히 연결될 것이다.

만일 ㉠ 북한이 개혁 공산주의 혹은 시장 사회주의로 변화하고, ㉡ 남한이 安定된 민주사회로, 경제적 민주주의로, 선진 복지국가로 발전한다면, 안보와 통일의 양개념은 양립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및 해외 동포의 마음이 거듭나서(변화하여)民族, 政治共同體 문화로 형성되지 않는 한 단순한 제도나 체제의 통합은 예멘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그 전도가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統一 目標文化(統一未來像), 통일과정, 통일 목표문화에 상합하는 남북한 체제의 변화, 발전 모델에 대한 남북한의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또는 여러 이익집단 사이의 허심탄회한 토론과 의사 소통의 날이 언제 인가는 오리라 확신한다.

參 考 文 獻

- Kim, Gahb Chol, "A Model for a Reunified Korea : Political Unification and National Reintegration", in *Korea Observer*, Spring 1995, vol. 26, no. 1.
- _____, "Change in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in *Vantage Point*, December 1990/January 1991, vol.13 no.12-Vol. 14 no. 1.
- Minkenburg, Michael, "The Wall After Wall : On the Continuing Division of Germany and the Remaking of Political Culture", in *Comparative Politics*, October 1993, vol. 26, no. 1.
- Etzioni, Amital, *The Active Society : A Theory of Societal and Political Processes*(New York : The Free Press, 1968)
- Johnson, Chalmers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5)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 사회과학 출판사, 1975)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94. 11. 1), 로동신문, 1994. 11. 4.
- _____,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조건이다" (1995. 6. 19), 로동신문, 1995. 6. 21
- 김갑철, "북한의 '주체사상'과 그 체계화 : '주체사상 총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1990. 제30호 1집, pp.183-225.
- _____, "조국통일과 민족주의 : 북한의 민족주의 이용 사례", 현대이념연구, 1991. 제7집